

산은 부산 이전, 2년째 계류 중... 부산상의, 국회청원 돌입

산은법 개정 촉구 출정식 열어
탄핵정국에 동력상실 위기감
지역 경제계 절박함 전달

지역 경제계가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 회장을 청원인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개정 촉구 국회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상의는 지난 5일 오후 부산상의 홀에서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인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현 국회의원 및 유관 기관장과 지역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5월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 기관으로 정식 고시했음에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관련한 산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함을 전달하고, 입법 개정안



부산상공회의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계는 국회를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국회 청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자 한다.

국회 청원은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 그리고 청원 요건 충족 검토로 청원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부산상의는 국회 청원 청원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비수도권 성장 정체 장기화와 수도권 의존형 경제 구조 고착화로 경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신보호 무역주의 확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산업 자본 및 인프라 기반이 우수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하며 그러려면 산업 육성과 지역 개발 경험

등 축적된 정책 금융 역량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하게 산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행정 절차가 완료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국회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지역 경제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회가 자발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 청원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산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힘을 집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상의는 국회 청원의 1차 목표인 국민 동의 5만 명 달성을 위해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이동 홍보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교 입학식과 대학생 OT 등 다종밀집 행사에서 현장 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화순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화순군은 6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고, 307개 기관 중 화순군은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

화순군은 민원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등의 대내 활동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이용해 군민의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한 ▲기관장의 민원 행정 성과 ▲외국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합천군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 시행

합천군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26억 4400만원을 확보해 2029년까지 5년간 묘산면 웅기지구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정부의 재정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이런 합천군 바람에 청신호가 켜졌다.

/합천(전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주시는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10선 지정 및 환경 조성 ▲반려동물 펫피아 조성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이 추진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통영시

전기·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통영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에 22억 50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1억 6550만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 150대, 전기화물 50대, 수소승용 5대의 친환경자동차를 우선 보급하며 앞으로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목포 남항, 친환경 선박산업 거점 ‘주목’

암모니아 연료공급 등 기술개발 속도
교육연구지구에 연구동 등 건립 중
국제적 경쟁력 갖춘 거점으로 도약

목포 남항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선박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목포시는 미래 친환경 경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20년부터 약 156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을 통해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 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추진 차도선은 목포 인근 해상에서 실증 운항 중이며, 세계



목포 남항 친환경선박 연구 인프라 조감도. /목포시

최초의 2600톤급 해상실증선박(K-GTB)도 지난해 10월 목포에서 진수식을 마쳤다. 이와 함께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목포 남항 교육연구지구에 준중전시험동과 관제유지보수동이 준공됐으며, 연구동, 전력시험동, 국제협력복지동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ICT 인력양성 사업평가 ‘전국 1위’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평가
2년 연속 차지... 국비 4.3억 확보

경상남도과 경남테크노파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평가에서 경남·부산·울산 컨소시엄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비 인센티브 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

정보통신기술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4개 권역에서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동남권은 이번 평가에서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역대 성과’

130개 탈루 법인에 52.8억 추정

포항시는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부터 총 52억 8500만 원을 추정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전기세무조사 대상 120개, 자체특별조사 50개, 포함동 10개 총 180개 법인을 선정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특히 추정세목 중 취득세는 일회성 부과·징수로 끝나는데 비해 재산세 등 보유세는 전기 부과에 따른 매년 6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로 어려운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정세액은 취득세가 18억 5300만 원(35.1%)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 5300만 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300만 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4억 4600만 원(8.4%)이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대구시, 올해 친환경차 4204대 보급

578억 투입... 대상 확대 지원

대구시는 올해 578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총 4204대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종류별로 전기차 3477대(승용차 2970대·화물차 500대·승합차 7대), 이륜차 694대, 수소차 33대다.

대구시는 전기 승용차에 최대 830만 원, 전기 소형화물차에 1360만 원, 전기 중형버스에 6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